

이 자료는 '25.3.25(화) 11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(안)

2025. 3.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Economy
and Finance

순 서

[제1편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]

I. 재정운용 여건	1
II.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	4

[제2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]

I. 기금운용 여건	27
II.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	28

제1편
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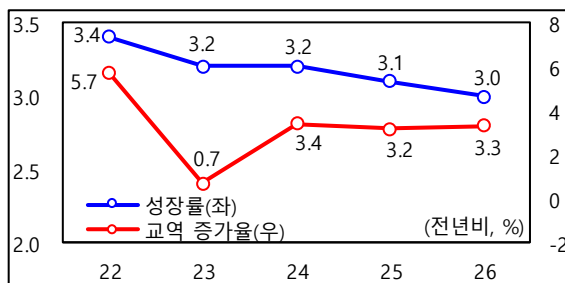
I 2026년 재정운용 여건

1 대내외 경제여건

□ [대외]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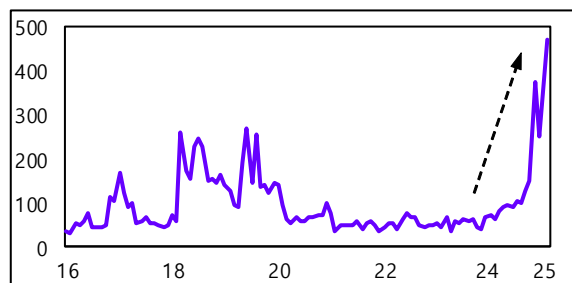
- 세계경제는 고물가 완화에 따른 통화긴축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, 주요국 통상·산업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
 - 관세 부과, 주요품목 수출입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성장·교역 위축, 인플레이션 자극 등 하방리스크 상당
- 이 과정에서 AI·반도체 등 국가 간 첨단·주력산업 주도권 경쟁 심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도 가속화

글로벌 성장·교역 전망



* 출처: OECD(성장률, '25.3월), IMF(교역량, '25.1월)

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



* 출처: IMF('25.1월), Caldara et al.

□ [국내] 경기 하방위험 속 민생 어려움과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

- 우리 경제는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,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리스크 확대
-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영향이 여전히 소비·건설 등 내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어려움 지속
- 생산연령인구 감소, 투자 증가세 둔화, 생산성 향상 지연 등이 장기간 지속되며 잠재성장률 둔화

* 잠재성장률(%), 연평균, 한국은행: ('16~'20) 2.6 → ('21~'23) 2.1 → ('24~'26) 2.0

□ [현황]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지속가능성 우려

○ 그간 우리 국가채무는 주요국 대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

* '23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(IMF, '24.10): (韓) 51.5 (美) 118.7 (日) 249.7 (獨) 62.7

- 코로나 시기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절감재원은 취약계층 및 첨단산업 지원 등에 투자

* 총지출증가율(% , 본예산): ('21) 8.9 ('22) 8.9 → ('23) 5.1 ('24) 2.8 ('25) 2.5

* 국가채무 증가액(조원): ('21) 124.0 ('22) 96.7 → ('23) 59.4 ('24) 61.4 ('25) 77.6

○ 향후 성장을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

* 국가채무비율(예산정책처, '25.2): ('30) 55.3 ('40) 80.3 ('50) 107.7 ('60) 136.0 ('72) 173.0

-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고령화 등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강조

* IMF('25.2) "고령화 등 미래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 필요"
피치('25.2) "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 증가시 신용등급에 부담"

□ [세입] 대내외 변동성 증가로 세입여건 불확실성 심화

○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중장기 세입 증가속도가 둔화, 대외 여건·자산시장 급변으로 단기적 세입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

○ 국세수입은 경기 회복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교역·공급망 환경변화 등 감안시 세입여건 리스크 증가

- 국세외수입은 가입자 확대,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 기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

□ [세출]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량지출 소요도 확대

○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

* 의무지출 비중(% '24~'28 중기계획): ('24) 52.9 ('25) 54.2 ('26) 55.6 ('27) 56.5 ('28) 57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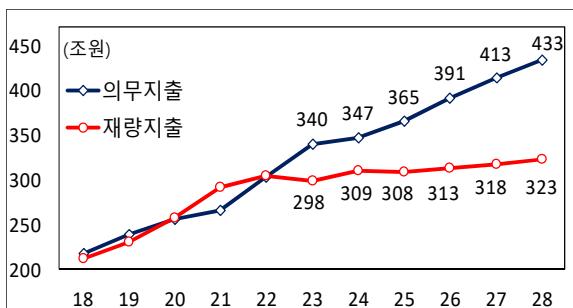
* 예산('24→'25년, 조원): 총지출 +16.7(656.6→673.3), 의무지출 +17.6(347.4→365.0)

- 특히, 초고령사회 진입('24.12월)에 따른 연금·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, 국채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계속 증가 전망

* 생산연령인구(% 통계청): ('24) 70.2 ('25) 69.5 ('30) 66.6 ('40) 58.0 ('50) 51.9 ('60) 48.9 ('65) 47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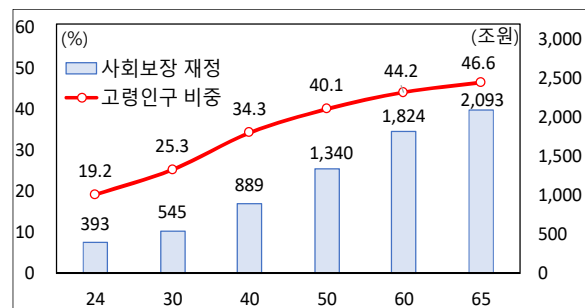
* 사회보장 재정추계(조원, 복지부): ('24) 393 ('30) 545 ('40) 888 ('50) 1,340 ('60) 1,824 ('65) 2,093

의무·재량지출 추이



* 출처: '24~'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'25년 예산

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



* 출처: 보건복지부('24.11월,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)

○ 경기회복 마중물, 산업 경쟁력 제고, 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재량지출 소요도 증가

-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본격화, 보호무역주의 심화,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재정수요 대두

* 美 스타게이트(5,000억불), EU AI기가팩토리(2,000억유로) 등 주요국 투자계획 발표

- 출산율 반등, 기후위기·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구조 개혁과 재난·재해 및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안전·안보 소요도 증가

⇒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 필요

Ⅱ 예산안 편성방향

1 기본 방향

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

-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·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,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중점 지원
- 건설 부진·수출 둔화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지원하고, 업종별 상황에 따른 일자리 수요·공급 불균형 완화

② 산업구조 AX·DX, 수출·공급망 안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

- 글로벌 기술경쟁이 본격화되는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,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·디지털 전환(AX·DX) 추진
-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지역·품목을 다변화하고,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

③ 경제·사회 체질 개선으로 인구위기·지역소멸위기 대응

- 출산율 반등을 확고히 하도록 일가정양립·양육·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,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·소득·돌봄 지원
- 지역거점 중심 산업·정주여건·교육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뒷받침

④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

-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, 구조 개편 등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
-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,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 지원, 부처간 융합·협업 강화를 통해 저비용 고성능 재정지원 체계 마련

민생경제 회복, 글로벌 경쟁력 강화

기본 방향

- ① 민생안정·경기회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뒷받침
- ②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확보

재정투자 4대 중점

민생안정·경기회복

-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
- 청년 등 일자리 창출, 일자리 불균형 완화
-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
- 주택·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

산업 경쟁력 강화

- AI 혁신생태계 조성
- 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·주력산업 지원
- 선도형 R&D 전환 정착
-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

지속가능한 미래

-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
-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원
-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
- 신산업·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

국민안전 확보, 굳건한 외교·안보

- 민생침해범죄 예방·대응
-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
- 첨단전력 강화, 방위산업 육성
- 양자·다자 외교 역량 확충

재정운용 혁신

재정지출 효과 제고

- 구조적 문제 해결, 수요자 맞춤형 지원
- 부처 융합·협업 강화
- AI·디지털 기반 재정운용 체계 구축

지출 구조조정

- 의무지출 소요 재점검, 구조개편 등 효율화
- 재량지출 10% 이상 감축
- 보조·출자·출연 정비

투자자원·방식 다각화

- 민간자원·금융 활용
- 조세지출 관리 강화,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
- 기금·회계 여유자원 효율적 활용

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뒷받침

- (내수회복) 영세 소상공인, 전통시장 등 취약부문 소비를 진작하고, 경영비용 절감, 매출기반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
- (일자리) 청년·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, 업종별 일자리 불균형 완화 및 노동약자 보호
- (사회적 약자) 기초수급자·장애인·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자립기반을 강화
- (지역경제) 공공주택 공급, 노후·안전 SOC 조기 보강으로 서민주거 안정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

②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

- (AI) 세계최고 수준 AI모델 개발, 우수인재 양성·유치, 컴퓨팅 자원·데이터 인프라 확충, AI 산업화 등 혁신생태계 조성
 - (첨단·주력산업) 반도체·바이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조선·방산·철강 등 전략·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
 - (선도형 R&D) AI·바이오·양자 3대 게임체인저 기초·원천기술 투자를 강화하고, 우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확대
 - (수출·통상)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수출애로 해소, 재건시장·글로벌 사우스* 新시장 개척, 수출품목 다변화 추진
- * 아세안, 아프리카, 중남미, 중앙아 등 남반구·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
- 유턴·외투·지방기업 지원, 수입다변화·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

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·사회 체질 개선

- (인구위기) 저출생 대응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, 돌봄,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, 저출생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
 -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·소득·돌봄 지원 확충
- (지역소멸위기)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,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
 - 농어업 스마트화, 농수산물 수급구조 개선으로 농어촌 경쟁력 제고
- (기후위기) 2035 NDC(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) 수립에 따른 분야별 탄소 감축을 지원하고, 원전·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
- (미래인재) 산업계 수요가 큰 미래 신산업 및 첨단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, 영유아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

④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·안보

- (법질서) 마약·디지털성범죄·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·수사 역량을 강화하고, 범죄피해자 직·간접 지원을 확대
- (안전) 재난 대비 인프라·시스템을 확충하고, 지역·필수 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
- (국방) 드론·AI·위성·레이저 등 첨단전력 증강 및 방위산업 성장·수출을 지원하고, 군 복무여건을 지속 개선
- (외교)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·다자 외교 역량을 확충하고, 우리 기업·청년 해외진출과 연계한 전략적 ODA 강화

① 재정지출 효과 제고

- (문제해결 중심) 정책수요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 재정 지원
 - * (예) 소상공인: 온라인 매출비중 및 인건비 증가 → 판로 다변화, 스마트화
- (융합·협업) 예산 요구시부터 범부처 협업·융합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집행 단계에서도 수요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(AI·디지털 재정운용) 예산 편성·집행, 국고보조금 관리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AI·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
 - * (예) 특정 패턴을 기준으로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'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' 활용
- (Top-Down 지출관리)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한도 내 지출효율화 및 재투자 방안을 적극 발굴

②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

- (의무지출 점검) 인구구조 등 여건 변화, 효과성,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 병행
 - 의무지출 예산 요구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
- (재량지출 구조조정)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% 이상 구조조정 추진
 - 신규 예산 요구 시, 조세지출과의 유사·중복 여부(지원목적·대상·효과 등)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

- (성과관리 강화) 연례적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 성과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예산 환류도 강화
 - 성과평가간 평가대상·항목 중복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과 투명성 제고에 집중
- (보조·출연·출자)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, 유사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조율을 설정
 - 출자·출연은 사업성과 점검 후 유보금 등을 고려해 예산 요구
 - * (예) 모태펀드 출자는 회수재원 및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

③ 투자재원 다각화 및 재정여력 확보

- (민간역량)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고, 지자체·공공기관·개발이익 등 다양한 재원도 병행하여 투자
 - * (예) 정보화 사업은 클라우드, 상용 S/W 등 민간서비스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
- (세입 기반 확충)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 등 조세지출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, 탈루소득·체납세액은 철저히 과세
 - AI 빅데이터 활용,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
- (재원간 칸막이 해소)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·회계는 다른 기금·회계로 전출·예탁 추진
 - 중앙·지방정부 역할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분담 방안 검토
- (국유재산)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효과성·타당성 낮은 특례는 정비하고,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

(1) 보건·복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두텁고 촘촘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
 - 기초수급자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
 - 일자리, 자산형성, 자립자금 지원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
- ☐ 일·가정양립, 양육·돌봄, 주거 등 저출생 핵심분야 집중 투자
 - 육아휴직, 유연근무 등 출산·육아기 근무여건 조성 지원
 - 돌봄서비스 확충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신혼·출산가구 대상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
- ☐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고용·소득·돌봄 지원 지속 확충
 -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하고 은퇴 후 경력전환·재취업 지원
 -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및 고령자 주거 서비스 확충
- ☐ 지역·필수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
 -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·시설 투자를 지속하고, 필수·공공의료 적시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등 인프라 확충
 - 우수 의료인력 양성 지원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사회보험·사회보장급여의 효과성 제고 및 반복·장기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- ☐ 지원대상·전달체계가 유사한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·통합

〈 일자리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공공·민간 직업훈련을 신산업·융합 과정 중심으로 선진화하고,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 및 유치 기반 강화
 - 취업 및 이·전직 지원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미스매치를 해소하고, 빈일자리 취업·근속 인센티브 확대
 - 「지역인재 양성 - 취업지원 - 정착유도」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일자리 기반 마련
- ☐ 청년·중장년·고령층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 - 쉬었음·미취업·재직·취약청년 등 유형별 패키지 지원
 - 「경력설계 - 이·전직 - 계속고용」 단계별 지원으로 계속근로 의지가 높은 중장년·고령층의 중소기업·빈일자리 진입 확대
- ☐ 일·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적·재정적 지원 확대
 - 육아휴직·유연근무 등 제도 활용도 제고로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을 지원하고, 직장복귀 후 일·육아 병행 여건 조성
- ☐ 노동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
 - 임금체불·저소득 근로자,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 보호
 -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지원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실효성이 낮은 현금성 장려금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,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제도개선 추진
- ☐ 저성과·유사중복 직업훈련 재정비 및 산업 수요에 따라 재편

< 청년 >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유망 신산업, 지역 핵심산업에 청년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-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
 -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·신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최고 수준 인재 유치 지원
 -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진로 탐색, 경력개발,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
 - 지역 핵심산업 분야 정주형 인재양성 위해 중앙-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산학 연계,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
- ☐ 청년의 공정한 출발 및 생활 체감형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·자산형성·복지 등 중점 투자 및 서비스 편의성 제고
 - 쉬었음·미취업·재직·취약청년 등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지원 체감도 제고
 - 청년주택드림대출, 공공분양·공공임대 등을 지속 지원하고,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
 - 고립은둔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통합지원체계 강화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청년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성과 사업은 통폐합하고 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
- 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·중복사업 조정,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구축·개선 등 사업 간 역할분담·연계 강화

(2) 교육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**고숙련 인재 양성** 지원을 강화하고, 지역 기반의 **대학지원 생태계** 뒷받침 등 **고등교육 투자 강화**
 - 인공지능(AI)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**첨단분야 특성화대학, 부트캠프** 등 지원 확대
 - 기초·핵심 학문 분야 및 미래 **첨단 산업**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**교육·연구 역량 강화**
 - 지자체별 성과 분석을 통해 **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**를 **내실화**하고, **글로벌대학 혁신모델의 고도화** 및 **확산** 지원
- ☐ 고등교육 이외 전 생애 걸친 **차별 없는 교육기회** 제공을 통해 **안정적인 교육사다리** 구축 지원
 - 영유아 교육비, 늘봄학교 지원 등 **돌봄망**을 **촘촘하게** 구축하고, 장애·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**초·중등 교육격차 해소**
 - **취약계층**(저소득, 장애인, 노인 등) 대상 **평생교육바우처** 지속 지원 및 대학생 연수 등 **청년 국제교류 확대**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여 **지원 효과성 제고**
- ☐ **교육지자체 역할 제고**를 위해 유사·중복된 유·초·중등 사업에 대한 **국고지원 필요성 점검**

(3)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혁신산업, 해외 K-컬처 수요 연계 콘텐츠 경쟁력·확장성 강화
 -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콘텐츠 창제작 기업을 육성하고, 대형 플래그십 콘텐츠 및 신규 IP 등 전략적 금융 지원 확대
 - 대중문화를 넘어 문학·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활성화 및 우수작품·인재의 해외진출 지원
- ☐ 소상공인·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투자 확대
 - 방한 관광객 선호를 반영해 관광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고, 자영업·서비스업과 연계를 통한 연관산업 파급효과 극대화
 - 지역 고유 역사·문화·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, 권역별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
- ☐ 세대·계층·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향유여건 조성
 - 아동·청소년, 중장년 향유기회 확대 및 신진예술인 성장 지원
 - 통합문화이용권,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통한 취약 계층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, 지역별 특화 콘텐츠 발굴·투자
- ☐ 국가·세계유산 보존·보호 및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문화예술·관광·체육 분야의 관행적 보조율·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합리적 기준 설정 등 지원체계 재정립 추진
- ☐ 지역 내 문화시설 건립 시 중앙·지방·민간 역할분담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방안 검토

(4) 환경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반복되는 수해·가뭄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, 안정적인 먹는물·용수 공급을 위해 물 관리 시스템 구축
 - 신규 물 수요를 고려한 댐 건설, 하천정비 등 치수능력 강화, AI 기반 과학적·체계적 홍수예보체계 지속 마련
 - 단선관로 복선화, 노후시설 개량 등 먹는물 및 산업용수 공급 안정화, 상·하수 관로정비 등 물 인프라 확충
- ☐ 2035 NDC(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)에 따른 부문별 탄소 감축 지원
 - 국제 탄소규범 대비 탄소감축인프라 구축, 맞춤형 컨설팅·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
 - 일회용품 감량·재생원료, 사용후배터리·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등 대체자원 확보 및 저탄소 경제 도약 뒷받침
- ☐ 화학물질·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 최소화,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
 - 녹조 예방 및 수질오염 사고 안전관리 강화, 토양·대기·미세먼지 등 생활주변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지원
 - 차질없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이행을 위해 처리시설 지속 확충, 재활용 선별시설 고도화 등 인프라 투자 지속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해 기후대응기금 사업 내실화
- ☐ 무공해차 보조금은 시장 성숙, 국제 동향 등에 따라 지속 효율화, 이동거점·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충전 편의성 강화

(5) 산업 ·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첨단기술 경쟁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
 -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·인재양성·R&D·사업화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고르게 지원
 - 수출시장·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, 외국인·유턴·지방투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
- ☐ 무탄소 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·자원안보 확립 적극 뒷받침
 - 원전·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민간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고,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전력계통 효율화 지원
 - 에너지·핵심광물 및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화 투자 강화
- ☐ 중소·벤처기업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 뒷받침
 - 벤처투자 활성화 및 유망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전주기 지원
 - 중소기업의 AI·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경로 복원 지원
- ☐ 위기·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 및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
 -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·비용 지원을 강화하고, 폐업 예정자의 폐업·취업·재창업 등 재도전 뒷받침
 - 플랫폼 진출 등 매출 기반 확대로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촉진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융자·펀드 등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률 및 성과를 점검하고, 성과가 높은 분야로 재원 재배분
- ☐ 특별회계·기금에 대한 자체수입 확보를 통한 건전성 강화

(6) SOC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원활한 여객과 화물 운송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에 기여하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에 집중 투자
 - 철도·도로 병목구간 선로 확충 등 고속 간선망 기능 정상화, 출퇴근 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급행·도시철도 투자 지속
 - 가덕도 등 8개 신공항의 안전한 개항을 차질 없이 뒷받침
- ☐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경기 대응적 SOC 및 미래 먹거리 투자
 - 위험도로, 뉴빌리지 등 조기 투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
 - UAM 등 미래모빌리티 개발 및 SOC 해외진출 역량 제고
- 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투자 지속
 - K-패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저상버스·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
 - 노후교량·철도 시설개량 및 항공 안전설비·시설 투자 확대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교통수요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교통시설 지원 방식 효율화
 - 국가·공공·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고, 시장수요가 충분한 교통인프라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
- ☐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및 출자수입 등 세입확충

[7] 농림수산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, 청년유입, 수출 지원
 - 스마트 농수산업 확대를 위한 농수산업 구조전환 기틀 마련하고, 유망분야 우수기업 발굴·육성 등 민간투자 유치 지원
 - 청년의 농·어촌 진입부터 정착까지 주거·자금 등 맞춤형 지원,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리스크 대응, 기업애로 해소
- 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
 -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수급관리 시스템 마련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추진
- ☐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직불제 관련 투자 확대
 - 농가 평년 소득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
 - 직불제를 통해 쌀 적정생산 및 농어촌 환경개선 뒷받침
- ☐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
 -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수요 농가와의 매칭을 지원, 농·어업인의 건강권 보호 강화
 - 유해시설 정비,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농·어촌 생활인구 유입, 서비스질 향상 등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-지자체,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추진
- ☐ 쌀 적정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전락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고, 농업 SOC는 디지털 기술 활용 효율화

(8) R&D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선도형 R&D 전환 기반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확보 총력
 - 범용 AI, 반도체 등 AI 신기술 확보, 산업생태계 AI 대전환, 최고급 AI 인력양성·유입 등 AI R&D 최우선 투자
 - 데이터·AI 기반 융합연구, 세포·유전자 치료 전주기 연구, 글로벌 플래그십, 우수인재 양성 등 첨단바이오 집중 육성
 - 양자·SMR·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기술주권 확보
- ☐ 딥테크 등 우수 기술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본격화
 - R&D 기술단계(기초-응용-개발), 상용화 성장단계(창업·기술이전·스케일업) 등 부처별·부처간 기술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
 - 정부 R&D와 펀드·용자 등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
- ☐ 이공계 인력 대상 연구기회 확대 및 최고수준 인재 양성·확보
 - 젊은 과학자의 수월성·전략성 연구 및 안정적 연구기회 보장
 - 첨단기술 인재 확보 가속화, 해외 고급 인력 국내 유입 등
- ☐ R&D 기초 기반 확대 및 연구과제의 혁신성·자율성 강화
 - 창의·우수 기초연구, 출연연 융합연구 중심 투자 확대
 - 글로벌 공동연구, 혁신도전형 R&D 등 고성과·도전성 제고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R&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추진(국가재정법 개정) 이후 국가·부처임무형 프로그램 사업 통합에 따른 재구조화 추진
- ☐ R&D 사업의 조세지출 중복 및 민간투자 구축을 점검하고, 성과·평가 미흡 및 유사·중복 사업은 구조조정 실시

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〉

① 인공지능(AI)

☐ AI 일등국가 도약을 위해 생태계 혁신 가속화

- 국가 AI컴퓨팅 센터 개소 등 AI 연구·개발 환경 대폭 개선, 범용AI, AI반도체 등 차세대 시장 선점 AI 핵심기술 투자
- 학습용 데이터 활용 지원, AI 혁신펀드 투자, 경쟁을 통해 선발된 정예팀 파격 지원 등 세계 선도 LLM 개발 뒷받침

☐ AI 융합을 통한 산업 현장·제품·서비스 대전환(AX) 촉진

-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, 산업현장 AI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혁신
- 온-디바이스 AI, AI 에이전트* 탑재된 자율주행차·모바일, 개인맞춤형 건강·예후 관리 등 AI 제품·서비스 경쟁력 제고

*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율적 의사결정·행동하는 AI

② 첨단바이오·양자

☐ 첨단바이오 혁신·융합 기술 기반 전주기 협업체계 강화 및 민간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

- 세포·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도전적 연구 집중 지원, 데이터 활용 및 AI 플랫폼 적용(AI 신약개발 등) 강화
-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,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, 의과학자 및 산·학·연·병 연구 지원

☐ 양자 컴퓨팅·통신·센싱 플래그십 중심 코어기술 확보, 대학-출연연 융합인재, 소재·부품·장비 등 기반기술 확대

[9] 국방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北 핵·미사일에 대비한 3축체계 핵심전력을 고도화하고, 드론·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 대비 전력 강화
 - 北 위협에 대한 감시·정찰·대응능력을 강화하고, 드론·AI·위성·레이저 등 미래 대비 첨단전력 투자 확대
- ☐ 방산 클러스터 고도화 및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 공고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성장 지원
 - 권역별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, 국제 방산협력 강화 등 방산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혁신기업 발굴·지원 확대
- ☐ 유무인 복합 장비·시설을 확충하여 첨단 정예강군 전환을 촉진
 - 핵심 전투장비 및 작전시설, AI 경계체계 등을 적기에 확충하고, 실전적 전투역량 확보를 위한 과학화훈련체계 구축
- ☐ 장병 의식주 등 복무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군 복무만족도 제고
 -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급식·피복을 개선하고 병영생활관(2~4인실) 및 간부숙소(1인 1실)·관사(국민평형) 확충
 - 국방인력의 안정적 획득·유지를 위한 직업군인 처우개선 및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
- ☐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예우 강화
 - 보훈급여 인상,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등 보상·의료서비스 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고령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안보환경 급변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저인력·고효율 운영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
 - 무기체계 투자 우선순위 조정, 전력지원체계 지출 점검 등

[10] 외교 · 통일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경제협력 관점에서 우리 기업 해외진출, 글로벌 인재양성 등 ODA를 통한 국익 극대화 및 개도국 원조 효과성 제고
 -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* 등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, 현장과 연계한 협력패키지,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등 협업 ODA 강화
 - *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도국 현지법인 차관 지원
 - 아시아, 아프리카 등 경협 수요가 높은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,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·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 확대
- ☐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자·다자 외교 역량을 확충하고, 대국민·재외동포 지원
 -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정책 조율 및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글로벌 입지 확보
 -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, 핵심기술분야 국제 규범 논의 적극 참여 등 경제안보·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국익 뒷받침
 -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고,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지평 확대
- 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평화 통일 기반 구축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ODA 사업 중 저성과·집행부진 등 비효율적 지출을 점검하고, 우리기업 진출·인재양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
- ☐ 국제질서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고, 비효율·비체계적 사업의 재구조화 추진

[11]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,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확대
 -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소멸지역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, 접경지역, 섬 등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
 - 민간자금·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속 지원
- ☐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 서비스 및 AI 활용,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
 - 민간 클라우드, 상용 S/W 등 민간 서비스 우선 활용, AI 도입 정보시스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 육성
 - 출산·양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혜택알림 및 구비서류 최소화,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 구축 지원
- 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고 서민·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지속하며, 청년 자산형성 지원
 -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·생태계펀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, 새출발기금, 청년도약계좌도 안정적 운영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지역주도 발전, 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과성 점검 및 개선 추진
- ☐ 중요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은 통·폐합을 추진하고,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등을 점검

[12]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일상 속 첨단지능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·간접 지원을 내실화
 - 마약·보이스피싱·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수사장비 및 시스템 확충
 -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·의료비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,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내실화
- ☐ 국민 권리구제 절차 및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강화
 - 플랫폼 활용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전국민 접근성을 높이고,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 지원
 -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력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
- ☐ 극한 기후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하고, 안전사고 예방·대응을 위한 생활안전정책 추진 및 대응장비 확충
 - 도심 침수예방 시설 및 재해위험지역 재해예방 인프라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예측 불가능한 극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
 - 연령별 맞춤형 생활안전정책을 추진하고, 대형사고·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훈련·장비 등 지속 보강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범죄 유형 및 양상 변화에 따른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및 집행부진, 외부평가 등의 환류 강화
- ☐ 재해예방 인프라 효율화 및 성과저조·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

〈 안전투자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극한 기후위기 피해 저감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
 - ICT기반 예·경보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전 대응력 제고
 - 극한기후로 인한 태풍·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하천·하수관로 등 종합정비 지속 추진
- ☐ 선제적 신종·복합재난 대비 국가안전시스템 구축
 - 전기차·배터리 화재 등 신유형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잠재 사고위험 시설물·안전 사각지대도 지속 점검·정비
 - 소방·해경·지자체 등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연계·협업을 통해 재난 즉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확립
- ☐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중점
 - 어린이 교통안전부터 어르신 생활안전까지 일상생활 속 안전 캠페인 등 연령·세대별 맞춤형 생활안전정책 추진
 -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과 대형사고 발생우려시설에 대한 소방훈련·장비 투자

2. 지출혁신 추진계획

- ☐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재난안전분야 투자성과 점검 및 성과저조 사업 구조조정 추진
 - 신종위험·복합재난 확대 등 안전투자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집행 부진사업 정비

제2편

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◇ 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상 별도 열거되지
아니한 사항은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」을 준용

I 2026년 기금운용 여건

① [경제여건]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

※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

② [수입여건] 사회보험성 기금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나 증가세 둔화

- 사회보험성 기금은 가입자 소득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나,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 등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
- 사업성 기금은 용자원금회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법정 부담금, 재산수입 등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

③ [지출여건]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, 주요 정책과제 대응 필요

- 공적연금 급여지출,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높게 유지되면서 전체 기금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
- 민생안정·경기회복,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속 가능한 미래, 국민안전·균건한 외교·안보 등 주요 정책과제 뒷받침 필요

④ [기금수지]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대다수 기금은 적자 지속

-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사업성 기금 등의 수지는 지출 확대로 적자를 지속할 전망

Ⅱ

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1

기본방향

① '26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' 중심으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

* ①민생안정·경기회복, ②산업경쟁력 강화, ③지속가능한 미래, ④국민안전·굳건한 외교·안보

-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, 내수 어려움 지속에 따라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·일자리 등 중점 지원
-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,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첨단산업·기술 경쟁력 강화 및 우리기업 수출·수출 뒷받침
- 출산율 반등을 확고화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, 주거 등 지원과 더불어,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도 차질없이 지원
- 국민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·안보를 위해 응급의료·산업재해 대응 역량 제고 및 개발협력·공공외교 강화

② 강도 높은 지출관리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·통합적 운용

-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중장기 소요 점검 및 구조개편, 재량지출 감축 등 강도 높은 지출관리 추진
- 아울러 연기금투자몰을 적극 활용하고 재원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·통합적으로 운용

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뒷받침

- (소상공인) 위기·폐업 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고, 매출기반 확대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촉진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)
- (중소기업) 중소·벤처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주기 지원하고, 금융안전망 강화(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)
- (주거)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 지원하고, 속도감 있는 재정비·택지개발로 공급기반 조성(주택도시기금)
- (일자리)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강화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고, 청년·중장년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(고용보험기금)

②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

- (AI) 차세대 핵심기술 및 세계 선도 모델 투자, 최고급 인재양성, 산업 AX 촉진 등 생태계 혁신 가속화(정보통신진흥기금)
- (첨단산업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경쟁력 지속 강화(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)
- (과학기술) 민간 R&D투자 및 사업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증 공급,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(기술보증/과학기술진흥기금)
- (해외수주) 방산 등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, 중소중견 조선사 특례지원 등을 통해 수주·수출 증대 뒷받침(무역보험기금)

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·사회 체질 개선

- (인구) 일·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, 유연근무를 지원하고, 청년 및 신혼·출산가구 대상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지속(고용보험/주택도시기금)
- (농어촌) 신규진입 농업인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, 농산물 수급 구조 개선 등으로 농어촌 경쟁력 제고(농지관리/농산물가격안정기금)
- (기후) 탄소감축 인프라 구축,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탄소 감축 및 우리 기업 탄소경쟁력 강화(기후대응기금)

④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·안보

- (응급의료)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전 과정을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개편(응급의료기금)
- (산업재해)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, 폭염, 화학, 폭발 등 신유형 산업재해 대응 강화(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)
- (개발협력) 우리 기업 진출, 공급망 등 국익과 연계된 전략적 ODA와 디지털·기후대응 분야 협력 확대(대외경제협력기금)
- (공공외교) K-컬처 등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참여형·쌍방향 문화교류, 한국학 지원 등 공공외교 사업 강화(국제교류기금)

3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방안

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및 수입 확충

- (공통) 의무지출 소요 점검 및 구조개편 병행, 재량지출 감축, 성과 부진사업 예산 환류 강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
 - 자체수입 증대,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수입 확충을 통해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
- (사회보험성 기금) 중장기 재정추계 내실화, 가입자 확충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, 운용 수익률 제고 적극 추진
- (사업성 기금) 집행·성과 부진 사업 재구조화, 보조·출연·출자 사업 점검 등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자체수입 확충 노력
- (금융성 기금) 대위변제 집중 관리,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을 통해 신용·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

② 여유자금의 효율적·통합적 운용

- 연기금투자품을 통해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
- 기금별 재정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 운용 강화